

“복지부담 전가 재정악화”

파산제도 도입 추진에 지자체 반발

안행부 “지자체 방만 운영이 문제”

안전행정부(안행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화하면서 광주·전남 등 전국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외의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증가가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16일 안행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방부채는 2012년 통합회계 기준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 47조7395억원과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부채 52조4345억원을 합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재정이 이같이 악화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용인의 호화청사, 인천의 은하월미레일, 대구(국제)행사 유치 같이 지자체의 과잉행위나 호화청사 건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사업 등이 방만한 재정운영의 사례라며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을 파산제 도입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부담 전가와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이 51%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보육료나 74.5%를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정부에서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떠넘기다 보니 복지비 등의 해결을 위해 직원 경감비를 줄이고, 소모성 행사와 축제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지만, 쓸 돈이 부족해 매년 1000억원대의 빚(지방채)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올해 전체 예산에서도 사회복지비가 34%를 차지할 정도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광주·전남에서 1000억원이 넘는 세금마저 줄었다.

지방재정이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여서 지방재정 부실은 중앙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약으로 떨어진 상태다. 특히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16%에 불과하고, 도시지역인 광주도 40%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악화를 타개할 대책으로 지자체 파산제라는 카드를 뽑아낸 만큼 지자체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파

산제 도입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행사로, 재정자립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파산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만약 제도시행이 공식화된다면 공정한 룰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광주·전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 배려 없이 파산제가 시행된다면 제도 시작부터 타지역보다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주고, 이후에도 낙후도를 반영한 차등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사무와 재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존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 책임을 묻는 파산제 도입에 동의할 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되겠느냐”면서도 “만약 정부에서 파산제를 시행한다면 각 자치단체들이 동일선상에서 같은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현수 금메달에 국내팬은 웃지도 울지도...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빅토르 안(안현수)이 15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팔레스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 “쇼트트랙 파벌주의 타파” 성난 목소리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의 금메달 소식에 광주시민과 네티즌들의 마음은 축하와 씩씩함으로 뒤섞였다. 특히 주력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한국 남자 대표팀이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착잡함을 더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박민성(28) 씨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인 안 현수가 금메달을 따 자랑스럽다”면서 “하지만 빙상연맹 갈등 등 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개운하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서구 화정동의 정승현(37) 씨는 “빙상연맹이 선수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안현수의 금메달 소식은 러시아 신문 1면이 아닌 한국 신문 1면을 장식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체육계의 파벌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광주시민들의 비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현수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줄세우기·심판부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

니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발언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에서도 안 선수와 한국선수들을 응원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현한 글이 쏟아졌다.

아이디 js* * 의 한 네티즌은 “안 선수 한 사람이 러시아 쇼트트랙의 수준을 올렸다”며 “인재를 떠나보고 메달을 따지 못한 한국에는 뼈아픈 장면”이라고 썼다.

dj* * 의 또 다른 네티즌은 “향상된 실력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준 안현수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며 “어떻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인터넷 홈페이지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난 주부터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접속 시도가 폭주한 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빅토르 안의 금메달 획득 이후 그의 러시아 국적 취득에 대해 빙상경기연맹에 항의하려는 네티즌들이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언론들은 빅토르 안에게 ‘황제의 귀환’이라며 최대의 찬사를 보냈다. /박정욱기자 jwpark@

공공부문 비리 뿌리뽑는다... 공무원 선거개입 중점단속

법무부 신년 업무계획

정부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리 뿌리뽑기에 나선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발생하는 금품선사 및 흑색선사 전사법은 물론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 관련해 통신·에너지·교통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 역할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비리, 정보보호급 누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구나 승복하는 절제된 수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수사 지휘·평가시스템을 정립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달 중 선거사범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지자체·세무서와 함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집중 단속, 2차 범죄

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식품범죄·성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범죄(지능형 전자범죄)’ 개발을 추진하고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행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화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AI 한달...전남 닭·오리 60만마리 살처분

영암·해남·나주 등지 피해... 전국 380만마리 매몰

올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오는 17일로 꼭 한 달을 맞게 되지만 해남과 영암에서 추가로 AI 살처분이 이뤄지는 등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6일 전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된 해남군 마산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난 14일 폐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행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농장과 인근의 다른 농장의 살처분 규모는 1만4000마리이며, 이날 현재 나주와 해남, 영암 등지 농가 32곳에서 59만7700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영암군 군사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16일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18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 중 5건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전국적으로도 올 AI로 15일 현재 178개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오리 등 가금류 379만3000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한편 이번 AI는 과거 4차례 발생한 ‘H5N1’형이 아닌 ‘H5N8’형이라는 특이점이 있다. 다행히 H5N8형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닭·오리 등 가금류에는 치명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공성·구례 부당 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 감사... 80명 징계·21억원 재정상 조치

공성군과 구례군의 부당한 행정행위 수습점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성군의 종합감사 결과 특혜 계약, 부실 관리 감독 등 89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 80명을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했다. 회수 및 감액 조치한 재정상 금액은 19억3000여만원이다. 구례군은 모두 87건이 적발돼 90명이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21억여원의 재정상 조치를 각각 받았다.

공성군 공무원 6명과 구례군 공무원 6명은 각각 보조급 지원 단체로부터 여행경비로 2500만원과 4000여만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왔다.

공성군은 또 제대로 근무하지 않

는 어린이집 운전기사에 보조급을 주거나 지도점검이나 정산도 없이 급식비 2000여만원을 집행하고, 총의공인 조성사업을 하면서 업체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결국 7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부작정행 행정행위는 구례군도 사정이 비슷했다. 4배수에 들지 못한 공무원을 6급(계장)으로 부당하게 위촉승진하는 등 인사질서 문란 행위로 적발됐다. 8억7000만원에 달하는 의무품을 구매하면서 단 한차례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도로공사물량을 받아 외유를 다녀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26)-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뢰내용 노안리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기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트렌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창조경제의 씨앗! Business Idea를 사업화까지”

기업지원 주요 사업 설명회

’14.2.17(월)~21(금)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시각	주요 내용
14:00~14:05	개회 및 인사말
14:05~14:20	KIAT 소개 및 주요 사업 안내
14:20~15:00	1. KIAT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 두뇌전문기업 육성, R&D 지원사업
15:00~15:30	2. KIAT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 NTR, MCI, R, R&D 등 사업화 전환에 대한 지원 사업 소개
15:30~16:20	3. KIAT 기업지원 주요 사업 소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재지원 · 인력양성사업(특성: 경력개발지원)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특: 국제공동개발)
16:20~17:10	회의종료 및 환영사

* (참고) KIAT는 중소기업의 R&D 지원 기관